

흑산공항 찬반 갈등 언제까지...

환경부 서울항공청 안전 재보완 의사에 심의 중단 기본·생존권 vs 환경파괴·경제성 결여 결론 못내

흑산공항 건설은 1,833억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대 68만4,000㎡에 길이 1,200m 너비 30m 규모의 활주도와 계류장, 연면적 3,500㎡인 2층 여객대합실, 자동차 130대분의 주차장 등이 골자다. 2021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며 프로펠러가 달린 50인승 소형 항공기(ATR42 기종)가 취항한다.

공항이 설립되면 현재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7시간 걸리던 소요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국립공원인 흑산도의 자연환경 훼손을 피할 수 없다는 점과 경제적 타당성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속한 신안군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할지를 놓고

진행돼 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절차가 파행 끝에 끝내 중단되면서 흑산공항 사업 추진은 무기한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됐다.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서류를 재보완해 제출하면 심의가 속개될 예정이지만 보완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2016년 10월7일이었다.

같은 해 11월 제117차 국립공원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선박운항 강화 등 제3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경제성 및 조류 충돌 위험성 등 재검토 등 보완 요청이 나오면서 보류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해 7월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2개월 뒤 환경부에서 다시 보완을 요청했다. 철새 대책, 인구 유입 및 환경 오염 증가 등에 대한 환경수용력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방안 등을 요구했다. /최진화 기자

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2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재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 7월 '재보완 서류' 심의를 위해 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가 개최됐고 쟁점사항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계속 심의'가 결정됐다. 8월20일부터 9월7일까지 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 결정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 전문가 검토, 지역주민 의견청취,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토론회가 열려 지난달 19일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렸지만 파행 끝에 정회돼 오는 5일 속개될 예정이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올해 2월 제출한 재보완서에서 통행량 데이터, 자연환경 조사, 활주로 안전성, 지역경제 파급력 등을 더 보완한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여서 흑산공항 건설은 기약 없이 표류, '제2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가 될 전망이다. /최진화 기자

정기 브리핑

박주선 "항공사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 쟁겨"

대한항공·아시아항공 등 국제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들이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으로부터 걷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5년간 70억여원의 수수료를 쟁겨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박주선(광주 동남을)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징수 및 수수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징수액은 1,394억 8,300여만원이다. 이 중 대한항공·아시아항공 등 항공사가 위탁수수료(징수대행료)로 70억 7,000여만원을 받아갔다.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위탁수수료



는 인천공항공사 7.2%(항공사 5%, 공사 2.2%), 한국공항공사 7.5%(항공사 4.5%, 공사 3%)였으나, 2012년부터 공사가 받는 수수료는 없으며 각각 5%와 4.5%의 수수료를 전액 항공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박주선 의원은 "전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수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화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역차별 심각"

소방공무원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이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의원이 2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특수건강검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1인당 검진비용이 지역분별로 많게는 3배 이상 차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기준 소방공무원들의 특수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0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충북은 9만3,000원으로 책정돼 경기도와 3배, 무려 2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북의 경우 2016년 검진비용이 16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1년 만에 무려 42%가 줄어든 것이다. 강원도의 경



우 2016년 검진비용 28만원에서 1년 뒤인 2017년은 18만원으로 36%, 10만 원이 줄어 들었다.

충북과 강원도를 포함해 1인당 검진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지역은 제주(-4만4,826원), 강원(-3만9,649원), 충남(-1만원), 경남(-5,122원) 등 6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일에는 경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비용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소방청에서는 건강검진을 위한 보편적 기준 마련과 공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류 변화... 선거제 개편 '빙하' 움직임까

이해찬 "선거법 분리 논의" 총선 전 법 개정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헌법개정 논의와는 별도로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그 배경이 주목된다.

당초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은 권력 구조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개헌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30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데 이어 문화상 국회의장의 개헌 재논의 제안마저 힘을 받지 못하자 당내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정치를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자!

선거제도 개혁 촉구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당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지난달 방북했을 당시 별도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해찬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개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법만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8월 25일 당대표 취임 당시 "선거제 개혁은 개헌과 연계해서 다루지

않을 경우 대단히 협소하게 다뤄질 우려가 크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입장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 걸음 나아가 당내에서는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만큼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할 수 있

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적극 나서더라도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여야 협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어느 정당을 빼고 선거제 논의를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며 "정치개혁위가 가동되는 대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야 대정부질문 소득주도 성장 난타전

민주당 "심재철 불법 자행" vs 한국 "청와대 부정이 핵심" 공방

여야는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자료 취득과 공개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주도적으로 제출한 김경호 의원은 "심 의원의 비정상적 접근 경로를 파악한 후 3개의 ID를 추가 발급받았고, 8일 동안 19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며 "일련의 작업이 매우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있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둘러싸고도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한국당 김광립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이제 멈춰야 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시장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막 시작한 규제개혁 노력을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논거도 빈약한 이론 논쟁에 빠져들어 허송세월하고 있다"라고 가세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이 2일 국회 본회의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반납해달라"며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손금주 "농수산물 수출 1위 담배, 수입 1위 옥수수"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손금주(나주·화순)의원이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농수산물 총 수출액은 480억 9,020만달러였으며, 담배(퀵런)가 47억 3,450만달러 수출돼 농수산물중 해외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잠지가 32억 4,810만달러 수출돼 2위를 차지했고, 김(20억 8,420만달러), 음료(17억 9,520만달러), 라면(15억 9,2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농수산물 총 수출액은 78억 7,590만달러에서 91억 5,340만달러로 1.1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농수산



물 총 수입액은 2,048억 3,320만달러였고,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옥수수로 총 126억 9,530만달러가 수입됐다. 쇠고기 121억 3,360만달러로 뒤를 바짝 쫓았다.

손금주 의원은 "정부가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수출 총액의 증가세가 지지부진하다"며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문 기자

MB 선고공판 TV중계

재판부 "공공 이익 고려"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중계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원에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



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사건으로는 3번째 사례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첫 번째 사례였으며, 이어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 역시 TV로 중계됐다.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